

[사료4] 정미7조약(한·일 신탁약, 1907)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부수 비밀 각서) 제3조 다음 방법에 의하여 준비를 정리함.

1.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를 해산할 것.



***항일 의병 운동 의병 사진 주고 해당되는 의병 활동 문제!!**

- 을미의병(1895) : 명성 황후 시해 사건, 단발령을 배경으로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지방 유생층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남. 유인석, 이소응, 김복한 등의 유생층과 일반 농민,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들은 지방 관청을 공격·개화파 관리들을 처단·일본군 공격
- 을사의병(1905) : 을사늑약의 체결 → 민종식, 최익현 등은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거나 국가 존폐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의병을 일으킴.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 등장. → 관군의 공격으로 와해됨.
- 정미의병(1907) : 고종의 강제 퇴위 사건 계기 → 의병에 여러 계층이 참여하여 신분 차별 의식이 약화
- 의병 투쟁의 확산 : 의병 유생 지도자들은 1만여 명의 13도 연합 부대(13도 창의군)를 편성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 : 각국 영사관에 국제법상의 교전 단체로 인정 요구, 국외 동포에게도 격문을 보냄. →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촌락과 가옥을 초토화·양민 학살



***을사늑약 체결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본 조약에 고종 황제의 비준이 찍혀있지 않아, 문서 자체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늑약’으로 서술함) 아래 체결된 조약 순서 알아두기!!**

- 러·일 전쟁 이후 일본과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 체결(1905. 9.) : 일본은 러시아군의 만주 철수, 한국을 지도·보호·감리할 권리 승인, 랴오둥 반도 조차권 및 남만주 철도와 부속지 지배권 양도, 사할린 남부 할양 등 획득
-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체결(1905. 7.) :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함.
- 8월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영국의 인도 지배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서로 승인.
- 일본 정부의 특사로 온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을 동원한 상태에서 고종과 정부 대신들을 위협, 이완용 등의 을사5적¹⁾을 앞세워 이른바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1905).
- 결과 :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 통감부(외교 문제 및 한국의 전반적인 내정 모두 간섭, 조선 총독부 전신)를 설치.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 부임. 해외에 두었던 대한 제국의 공사관과 영사관 모두 철수.

***고종 강제 퇴위**

-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일제의 불법적인 국권 강탈을 폭로하여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고자 함. →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 → 일본의 방해로 성과 X,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킴.
- 일본은 정미7조약(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 : 통감이 한국의 내정 전권을 장악,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들이 정부의 주요 관직을 차지(차관 정치), 대한 제국 군대 해산, 사법권·경찰권 박탈.
-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1910. 8. 22.) → 대한 제국은 ‘조선’이라고 불리게 되고, 조선 총독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

1)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 박제순(외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권중현(농상부대신). (네이버 지식백과).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정책 연도별 일제 정책 반드시 암기!! 매우 중요!! 필수 출제!!!

	1910년대(무단통치시대)	1920년대(민족분열정책)	1930년대~1945년(민족말살정책)
일본의 탄압 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조선총독부</u> 설치 : 입법, 행정, 사법권 장악 2. <u>헌병 경찰 제도</u> : 즉결처분권 3. 출판·언론·결사의 자유 박탈 4. 일본어 위주의 교과목, 한국인의 고등 교육 기회 박탈 5. <u>토지 조사 사업 실시(1910~1918)</u> : 일본인이 쉽게 토지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 소유자 없는 토지는 총독부 소유로 편입./<u>동양 척식 주식회사</u> 설립. 6. <u>회사령 공포(1910)</u> : 한국인의 기업 설립 제한/ <u>임야 조사 사업</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1운동으로 무단 통치의 한계를 느낀 일제가 통치 방식을 전환함 → <u>문화정치를 표방한 우리 민족을 기만하고 친일파를 육성하려는 민족 분열 정책 실시</u> : 무관뿐만 아니라 문관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도록 개정.(그러나 실시는 되지 않음). 2. <u>헌병 경찰제</u> → <u>보통 경찰제</u> (그러나 경찰의 수가 더 증가) 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부분 허용 4. <u>치안 유지법 실시(1925)</u> : 항일 민족 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 강화 5. 일제의 이러한 정책에 동조한 일부 한국 지식인들은 민족 개조론, 자치론, 참정론 등을 주장하여 <u>민족 운동이 분열되기도 함</u>. 6. <u>산미 증식 계획 추진(1920~1934)</u> :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쌀의 생산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쌀이 부족하게 됨 → 이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려고 계획을 추진함. → 결과적으로 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의 군국주의화 → 중일전쟁 발발(1937), 태평양전쟁(1941) 2. 전쟁으로 일본의 국력이 소진 → <u>한국의 병참기지화 정책, 조선 공업화 정책, 남면복양 정책 실시</u> 3. <u>국가 총동원법 실시(1938)</u> : 인력과 물자의 수탈 더욱 강화 → 학도 지원병제, 징병제, 일본군 위안부. 4. <u>공출 제도</u> : 무기를 만들기 위해 금속 제품을 모두 수탈. 일제의 군량미 조달을 위해 <u>산미 증식 계획 재개</u>. 5. <u>조선 총독 미나미는 내선일체(일본과 조선이 하나) 강조</u>. 6. <u>황국 신민화 정책</u> : <u>황국 신민 서사 암송 강요, 신사 참배 강요</u>. 7. <u>제3차 교육령 공포(1938)</u> : 한국어 사용 금지, <u>황국 신민 학교 설립</u>, 창씨개명 강요, <u>동아일보·조선일보 폐간</u> 등 언론의 활동 전면 금지, <u>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1941) 실시</u>.

		<p>가 한국의 쌀 소비량은 감소, 식량 부족으로 농민의 삶이 더욱 악화됨.</p> <p>7. 회사령 폐지 →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관세 폐지</p>	
--	--	---------------------------------------------------------------------------------------	--